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Old-Age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저자 (Authors)	황선재, 김정석 Sun-Jae Hwang, Cheong-Seok Kim
출처 (Source)	한국사회학 47(4) , 2013.8, 201-226(27 pag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4) , 2013.8, 201-226(2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회학회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32632
APA Style	황선재, 김정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이용정보 (Accessed)	동국대학교 175.123.***.116 2020/07/15 14: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황선재** · 김정석***

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인구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오늘날 한국 노년층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제 영역에의 파급효과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그 소득불평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예: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그리고 주요 인구학적 변수별(예: 연령, 성, 교육수준 등)로 분해하여 분석해본다. 또한 노년기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강화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사실적 가정 관점에 입각하여 그 정도를 추정해본다. 분석방법으로는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 분해 분석과 타일지수 분해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년층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이 두 이전소득의 전체 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소득불평등을 특정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하위 집단 간 불평등과 하위 집단 내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은 집단 간 불평등이 아니라 집단 내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가정 관점에서 볼 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 전체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적이전소득의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어지는 결론 및 토론에서는 본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및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노년기 불평등,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분해, 타일지수 분해, 인구 고령화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세 분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fromhsj@gmail.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chkim108@dongguk.edu)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문제 중 하나는 인구고령화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고령화 수준을 측정했을 때, 2011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11.2%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14% 이상)로의 이행기에 서 있다(OECD, 2011). 한국에 앞서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끝내고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경우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여 년간 급격하게 낮아진 저출산 현상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¹⁾ 한국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 인구고령화에 의해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문제점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김미숙·원종욱·서문희·강병구·김교성·임유경, 2003; 김정석, 2007; 박경숙, 2003).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은퇴이후 노년층의 소득안정성 및 소득불평등 문제를 들 수 있다. 개인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은퇴시기를 즈음하여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본인의 노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소비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했을 때, 노년층의 소득 안정성과 불평등 문제는 은퇴 이전에 비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노년기까지 형성한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화가 원활하지 않은 부동산 형태로 묶여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은 소득보장성격의 사회안전망이 약한 사회에서는 생애과정을 거쳐 축적된 소득 및 재산 격차가 노년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더 확대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5-10여 년간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 노인가구 문제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동과 맞물려 노년층의 불평등 문제는 주요 인구문제 및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년기 소득 안정성 및 불평등 문제는 노인빈곤, 건강불평등과 같은 다른 제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 수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간주된다(김진영, 2007; 이미숙,

1) 엄격히 말해 평균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상호독립적인 인구현상이나 한 사회가 인구변천을 끝내고 인구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장기간에 걸친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만 0-14세 사이의 유소년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와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급격히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은 1.30으로, 2001년부터 10여년 이상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2005; Phelan, Link, and Tehranifar, 2010).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인구 내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그 소득불평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예: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그리고 주요 인구학적 변수별(예: 연령, 성, 교육수준 등)로 분해하여 분석해본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강화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사실적가정 관점(counterfactual framework)에 입각하여 그 정도를 측정해본다(Holland, 1986; Morgan and Winship, 2007). 이는 전체 소득 중에서 특정 소득을 제외하기 전과 후의 불평등 수준을 비교, 대조해보는 과정을 통해 ‘만약 그 소득이 없었다면 현재의 불평등 수준은 어떠했을까’와 같은 반사실적 가정상황을 설정해 보는 것인데, 분석 전후의 불평등 증감의 양에 따라 특정 소득이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다음 절에서는 21세기 초 한국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접근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험적 자료와 변수들을 소개한 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적 분석 기법들-지니계수 분해분석과 타일지수 분해분석-을 설명한다. 통계적 분석 결과를 다루는 장에서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정도가 소득원천별, 인구학적 변수별, 그리고 소득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에는 본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및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II. 21세기 초 한국 노년기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

특정 사회집단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문제를 논의할 때 흔히 언급되는 요소로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있다. 빈곤 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유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차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오늘날 한국 노인

층(만65세 이상)의 빈곤문제를 살펴보면, 2011년 OECD 자료 기준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²⁾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아일랜드(30.6%)보다 14.5%나 높고, 30개국 평균(13.5%)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석상훈, 2010; 오미애, 2013).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의 빈곤율이 14.6%로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유독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많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발생할 급속한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특히 독신 노인가구의 증가는, 향후 노인빈곤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김미숙 외, 2003; 구인회, 2006).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노인층 내의 소득불평등 정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세후 지니계수(=0.409)는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4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석상훈, 2012).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신광영(2009)과 이상봉(2010,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층 내 소득 및 자산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인층 불평등 증가는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전체 불평등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세대는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격한 경제발전 그리고 인구학적 변동의 결과 개인 간 사회경제적 이질성(heterogeneity)이 증가하던 시대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임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 이들 사이에 발견되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현재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에 비해 노인층 내 불평등 증가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덜한 편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함의를 고려했을 때 노년층 소득불평등의 전반적인 수준 및 원인과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구인회(2006) 역시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며 심화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의 원인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여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정체와 소득 불평등 악화, 저소득층 노인

2) 여기서 빈곤율은 전체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사이에서의 자녀세대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와 같은 외적인 여건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노인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노인층 내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특히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구조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이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핵심을 이루는 축을 중심으로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자는 아래의 <표 1>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원인 및 구조를 1) 시장적 요인과 시장 외적 요인, 그리고 이를 다시 2) 횡단적 요인과 종단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시장적 요인 (근로)	시장 외적 요인 (조세 및 복지)
횡단적 요인	고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리고 열악한 노년층 일자리	OECD 최고 수준의 가치분소득 불평등도와 이를 강화하는 OECD 최저 수준의 사회안전망
종단적 요인	생애과정을 거쳐 차별적으로 형성된 근로소득 및 재산의 누적효과	과거노동경력에 따른 선별적 사회보험 혜택

먼저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적-횡단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노동시장은 고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리고 열악한 일자리로 요약된다(신광영, 2009). 이는 은퇴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혹은 남아있어야만 하는 노인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은퇴연령 및 일자리의 질과 수준이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20대보다 오히려 40, 50대가 더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20대의 경우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경험의 증가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40대 이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저소득-저안정성의 썬피부르주아지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신광영, 2013; 이상봉, 2010).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한적이고 낮은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장적-횡단적 요인은 연령 집단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노인집단 내 불평등을 높이는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 경제불평등을 이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특성을 지니는 현재 40, 50대의 연령이 더 높아지면 잠재적인 노인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이미 65세 이전 빈곤 장년층에서 시작되고 있음 역시 시사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재분배 역할을 담당해야할 조세와 복지 같은 시장외적-횡단적 요인은 한국의 경우 비교적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하나, 시장소득에서 조세와 공적 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하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다(구인회, 2006; Smeeding, 2005).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역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높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미국,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 역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미애, 2013).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의 6분의 1, 일본(8.9%)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한국의 경우 조세와 같은 시장내적 재분배 요인뿐만 아니라 시장외적 재분배 요인 역시 불평등 완화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애과정(life course)을 통해 축적된 누적적 불평등(cumulative inequality)으로 대표되는 노년기 불평등의 시장적-종단적 측면을 살펴보자. 사실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에 비해 용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이 전 생애를 걸쳐 누적적으로 형성된 불평등의 복잡성 때문이다. 펌펠(Pampel, 1998)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은 나이 때문에 비슷한 경험과 사회적 역할을 공유하지만, 이들의 경험과 역할의 폭은 넓고, 그 속에는 엄청난 변이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이와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노인의 경우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난 후 인생경로를 따라 그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불평등은 노년 이전에 존재했던 불평등의 반영으로 노년 이전에 존재했던 불평등의 확대판이나 축소판일 수 있다(Dannefer, 1987; Elder and O'Rand, 1995; Ferraro, Shippee, and Schafer, 2009; O'Rand, 1996).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세와 복지에 의한 재분배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경우, 이

들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보유한 교육, 직업, 소득, 재산수준 등에 의해 생긴 초기 사회경제적 격차가 소위 말하는 “매튜효과(Matthew Effect)”에 의해 생애과정을 거쳐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박경숙, 2001; Merton, 1968). 따라서 한국사회의 노년기 불평등을 논하는 데 있어 이러한 시장적-종단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핵심적이며, 생애과정을 통해 형성된 시장에서의 누적적 이점/약점(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이 은퇴 이후 노인층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기제가 될 수 있다(DiPrete and Eirich, 2006).

마지막으로, 오늘날 노인층에서 발견되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앞서 언급한 횡단적인 요인들의 단순한 부가적 축적효과(additive cumulative effect)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생애과정을 거치며 겪게 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예를 들어, 계급, 성, 인종 등)과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의 결과임을 고려했을 때, 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이 두 가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 1>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 번째 요소, 즉 시장외적-종단적 요소가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노년 불평등의 또 다른 독특성은 노인들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도 공적, 사적 연금 프로그램에서 얻는 소득에 의존적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이유에서 노년기의 공적 퇴직연금은 불평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ampel, 1998). 하지만 박경숙(2001)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공적연금 지급률은 연령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기 전, 즉 퇴직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급액의 총량 역시 크게 차이난다. 뿐만 아니라 경로연금의 확대, 개편 등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성숙되기 이전에 노후를 맞이하는 노인세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구인회, 2006). 이는 은퇴 이후 지급하는 각종 공적연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수준은 과거노동경력이라는 요인의 부가적 효과와 은퇴이전 일자리의 질이라는 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와 복합적인 결과임을 의미하며, 이처럼 과거 노동시장경력에 따라 공적연금에의 차별적 접근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오히려 노동생애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노년기에 연장,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노동생애과정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예컨대, 성별-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를 연구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한 시장외적-종단

적 요인과 같은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이해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정석, 2003).³⁾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오늘날 노년층 소득불평등의 전반적인 수준 및 구조를 경험적으로 분해분석 해본다. 자료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앞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의 모든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특정 시점의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구체적인 소득원천과 소득유형별 등으로 분해분석 해봄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연구를 위한 초석과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예를 들어, 김진옥·정의철, 2009; 신광영, 2009; 여유진·김태완, 2006; 이상봉, 2010; 2011), 은퇴 이후의 노인층(65세 이상)을 하위 연령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유진·김태완(2006)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집단을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유의미한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노인집단 내의 이질성과 노년기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고자 한다.

Ⅲ. 자료, 측정,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 배포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이하 노인실태조사).⁴⁾ 노인실태조사는 노인관련 정책 개발에 필요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3) 물론 본문에서 언급한 시장적/비시장적, 횡단적/종단적 요인 이외에도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예: 1인 노인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동).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논의의 중심을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요인에 한정지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도에 실시되었던 노인실태조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버전과 여기에 2011년도 자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포함시킨 횡단자료 버전 등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횡단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둔다.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택된 가구와 가구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이다(정경희 · 오영희 · 이윤경 · 손창균 · 박보미 · 이수연 · 이지현 · 권중돈 · 김수봉 · 이소정 · 이용식 · 이윤환 · 최성재 · 김소영, 2012). 2011년도 자료의 경우 전국 3,142개의 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11,5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노인들의 가족 및 사회관계 현황,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경제상태, 건강 및 기능상태, 사회참여 실태,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과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인실태 조사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득관련 정보를 가구 및 개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전체표본 중 <표 2> 및 <표 3>에 정리되어 있는 변수들과 해당변수에 모두 응답한 10,980 명만을 분석표본(analytic sample)으로 추출하였다.

<표 2> 소득관련 변수와 기술통계(단위: 만원)

변수명	산술평균	표준편차	총소득 중 비율	최솟값	최댓값
월평균총소득	65.39	70.99	1.00	0	1130
근로소득	5.63	21.18	0.09	0	500
사업소득	11.27	41.46	0.17	0	1000
재산소득	8.30	34.62	0.13	0	900
사적이전소득	18.20	21.36	0.28	0	500
공적이전소득	20.65	39.44	0.32	0	400
기타소득	1.30	9.87	0.02	0	500
사례수(명)	10,980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인실태조사는 노인개인의 소득(2010년 세후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및 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 및 소득유형별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한다.⁵⁾ 이 중 사적이전소득은 동거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5) 소득불평등 분석의 쟁점 중 하나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구로 할 것이냐이다. 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비수준, 삶의 질 및 빈곤 문제 등을 논의할 때에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그리고 한 사회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을 측정할 때에는 개인소득에 기초해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구인회, 2006; 신광영, 2013; Smeeding, 2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개인

친지, 이웃, 복지관이나 종교,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현금, 현물 모두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타공적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국민기초보장생활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적연금은 다시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퇴직연금, 장애(상이)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고, 기타공적급여는 보훈급여(보훈연금, 각종수당), 고용보험급여(실업수당,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장애연금, 유족급여),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경증장애/장애이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로부터 구체적인 소득관련 기술통계치들을 살펴보면, 우선 분석표본으로 선택된 10,980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65.3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노동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전이전소득으로 각 32%와 28%로 측정되었다.⁶⁾ 하지만 총소득 및 각 소득원천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기술통계

변수명	응답범주	백분율(%)
연령(만 나이)	65-69세	23.54
	70-74세	30.70
	75-79세	26.42
	80세이상	19.34
성	여성	60.08
	남성	39.92
교육수준	무학/초등학교	72.53
	중/고등학교	22.60
	전문대학 이상	4.87
결혼상태	무배우	39.06
	유배우	60.94
거주지	읍면	38.08
	동	61.92
사례수(명)	10,980	

을 소득불평등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6)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크게 사회보험소득(공적연금(52%)+기타공적급여(13%))과 공공부조소득(기초노령연금(27%)+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리고 표준편차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노인 개인들 간의 소득 편차는 적지 않으며 이는 노인들의 소득분포 역시 일반적인 소득분포처럼 우측편포(rightly skewed)의 형태를 띠는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다섯 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자.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될 집단별 분해분석을 위하여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로 측정되었으며, 각 변수의 응답범주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연령변수는 65-69세, 70-74세, 75-79세, 그리고 80세 이상 등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 범주 당 23.54%, 30.70%, 26.42%, 19.34%의 노인들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분석표본에는 여성 노인(=60.08%)이 남성 노인(=39.92%)에 비해 더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한 차별사망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았으며(=72.53%), 중학 혹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22.60%,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4.87%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비율(=60.94%)은 배우자가 없는 비율(=39.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읍면부(=38.08%)보다 동부(=61.92%)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니계수 분해분석(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analysis)으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예: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며, 다른 하나는 타일지수 분해분석(Theil Index decomposition analysis)으로서 전체 소득불평등을 특정 사회집단(예: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등)의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는 국내외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치인 지니계수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소득원천이 전체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전체 소득불평등을 의미 있는 하위집단별로 나눈 뒤, 집단 내에서 기인하는 불평등과 집단 간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을 따로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

기 전체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 뿐만 아니라 소득집단 및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가지 통계적 분석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지니계수 분해분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니계수는 특정 사회의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서, 한 사회의 모든 개인이 동일한 소득을 지녀 완전하게 평등한 경우 0의 값을 가지며,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수치가 증가하여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완전한 불평등의 경우 1의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지니계수는 필요에 따라 소득원천(income source)별로 나누어 각 소득원천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쇼락(Shorrocks, 1982)의 방식을 확대 적용한 러만·이차키(Lerman and Yitzhaki, 1985)의 방식을 따라 총지니계수를 다음과 같이 분해분석 한다:

$$G = \sum_{k=1}^K \left(\frac{m_k}{m} \cdot \frac{2 \text{Cov}(y_k, F(y_k))}{m_k} \cdot \frac{\text{Cov}(y_k, F(y))}{\text{Cov}(y_k, F(y_k))} \right) = \sum_{k=1}^K S_k G_k R_k.$$

여기서 G 는 지니계수로 측정된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고, S_k 는 각 소득원천의 평균(m_k)을 전체소득의 평균(m)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전체소득에서 k 라는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G_k 는 특정 소득원천 k 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를 지칭한다. 또한 R_k 는 소득원천 k 의 순위와 총소득 순위 간의 지니 상관관계(Gini correlation)를 나타내는데, 이는 각 소득원천과 전체소득의 상대적인 분포 및 순위를 고려한 측정치로 특정 소득원천이 불평등 완화/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여기서 $F(y)$ 와 $F(y_k)$ 는 각각 전체소득과 소득원천 k 의 누적분포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스타크·테일러·이차키(Stark, Taylor, and Yitzhaki, 1986)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 전체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율(S_k), 2) 각 소득원천별 불평등(G_k), 그리고 3) 각 소득원천과 전체소득분포의 지니상관관계(R_k)를 독립적으로 나타내줌으로써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이 방식을 적용하면 특정 소득원천의 증감이 전체불평등 증감에 어떠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전체불평등도(G)를 특정 소득원천의 퍼센트 증가(e_k)에 대해 편미분(partial derivative)한 뒤, 그 값을 다시 G 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Lerman and Yitzhaki, 1985; Stark et al, 1986):

$$\frac{\partial G/\partial e_k}{G} = \frac{S_k G_k R_k}{G} - S_k.$$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소득불평등 분석방법인 타일지수 분해분석에 대해 살펴보자. 타일지수는 지니계수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 측정방식으로,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아래와 같이 특정 하위집단 간, 그리고 하위집단 내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Allison, 1978; Firebaugh, 2003; Theil, 1967)⁷⁾:

$$T = \frac{1}{N} \sum_{i=1}^N \left(\frac{y_i}{y} \right) \ln \left(\frac{y_i}{y} \right) = \sum_{j=1}^J p_j \left(\frac{\bar{y}_j}{y} \right) \ln \left(\frac{\bar{y}_j}{y} \right) + \sum_{j=1}^J p_j \left(\frac{\bar{y}_j}{y} \right) T_j.$$

먼저 T 는 N 명으로 구성된 전체집단에서 타일지수 방식을 통해 측정된 전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고, 이는 개인의 소득(y_i)이 전체 평균소득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있는지에 대한 비율에다 자연로그 형태의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첫 번째 등식). 이 정의에 따르면 타일지수가 취할 수 있는 최솟값, 즉 모든 개인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값은 0이 되고, 반대로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완전불평등의 상태일 때 발생하는 최댓값은 $\ln N$ 이 됨을 알 수 있다(Hwang, 2013). 이렇게 측정된 전체 불평등도는 다시 J 로 정의된 집단(예컨대, 연령집단)의 하위 집단 간 불평등(between-group inequality)과 집단 내 불평등(within-group inequality)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두 번째 등식), 여기서 p_j 는 전체인구에서 j 번째 하위 집단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T_j 는 특정 하위 집단 j 의 타일지수를 나타낸다.⁸⁾ 타일지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 연구에서와 같이 전체 소득불평등을 특정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하위집단 간 및 하위집단 내 불평등 분해분석을 요하는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7) 이외에도 타일지수는 불평등지수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특성들, 예를 들어 모든 개인에게서 같은 비율로 소득증가가 발생했을 때 변하지 않는 ‘규모불변성(scale invariance)’, 개인들 간 소득이전이 발생했을 때 그에 반응하여 지수 값이 변하는 ‘이전의 원칙(principle of transfers)’,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면 지수가 감소하는 ‘복지원칙(the welfare principle)’등을 가진다(Allison, 1978; Firebaugh, 2003).

8) 이러한 분해방법은 그 구조 상 분산분석(ANOVA)와 유사하며, 타일지수는 일종의 프랙털 구조(fractal structure)를 갖고 있어 집단 내 불평등은 다시 그 집단 내 하위집단 간 불평등과 하위집단 내 불평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김영미·한준, 2007).

이렇게 정의된 지니계수 분해분석과 타일지수 분해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한다. 1) 우선 지니계수 분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10년 세 후 소득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의 총소득 불평등을 각종 소득원천에 따라 분해 분석한다. 총소득을 구성하는 하위 소득원천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등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절대적,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각 소득원천의 증감에 따른 전체불평등도 증감에의 한계효과 역시 함께 산출하여 특정 소득원천의 규모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전체 소득불평등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정해본다. 2) 다음으로는 타일지수 분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총소득불평등을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정의된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 등의 다섯 가지이며, 특히 총소득불평등이 하위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하위집단 간 및 하위집단 내 불평등을 산출한다. 3) 마지막으로, 앞서 실행한 두 분해분석에서 총소득불평등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사실적가정 관점에 입각하여 이 두 가지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별도로 추정해본다.

IV. 결 과

우선 <표 4>는 지니계수로 측정된 총소득불평등(=0.468)을 여섯 종류의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의 첫 번째 열은 분해분석의 대상이 된 소득원천들을 종류별(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로 나열하고 있고, 두 번째 열은 앞서 분석방법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소득에서 k 라는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⁹⁾ 다음으로 G_k 는 특정 소득원천 k 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를 지칭하는데, 이 정보는 전체 소득불평등 수준에 비해 각 소득원천별

9) 이 결과는 앞서 기술통계에서 제시한 해당 소득원천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와 동일하다.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지니계수는 모두 0.9 이상으로 아주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몇 노인들의 높은 소득에서 유발된 우측편포형 소득 분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데(각 0.529, 0.637), 이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서 사적소득이전과 공적이전소득의 노인들 간 분포는 비교적 균등하기 때문이다.

〈표 4〉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분석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0.468)

소득원천(k)	S_k	G_k	R_k	전체불평등도의 영향력(%)
근로소득	0.086	0.933	0.623	0.021
사업소득	0.172	0.915	0.799	0.097
재산소득	0.127	0.915	0.756	0.061
사적이전소득	0.278	0.529	0.371	-0.162
공적이전소득	0.316	0.637	0.587	-0.021
기타소득	0.020	0.961	0.597	0.005

이어서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력을 살펴보자. 네 번째 열의 R_k 는 소득원천 k 의 순위와 총소득 순위 간의 지니 상관관계이자 각 소득원천과 전체소득의 상대적인 분포 및 순위를 고려한 측정치로, 특정 소득원천이 불평등 강화/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즉, 특정 소득원천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있고 대부분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특히 높은 값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R_k 값은 양의 방향으로 큰 값을 가질 것이고, 해당 소득원천은 총소득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특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반면, 특정 소득원천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개인들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형태를 띤다면, 이는 총소득분포에서 발견되는 전체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 분석 결과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G_k 값도 크고 R_k 값도 크므로, 소득원천별로 계산한 불평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소득원천이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바도 큰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G_k 값과 R_k 값을 보여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표 4>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통계치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각 소득원천의 한계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특정 소득원천이 전반적으로 1% 증가한다면, 전체 불평등도는 얼마만큼 증가 혹은 감소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은 모두 양의 값을 보이므로, 다른 소득원천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각 소득원천이 1% 증가할 경우 해당 통계치만큼 전체 소득불평등도도 증가함을 의미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불평등 강화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 통계치의 경우 모두 음의 값을 보여 두 종류의 소득원천에 대한 증가는 전체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 효과는 공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소득유형별 타일지수 분해 분석 결과

집단변수	불평등원천	소득유형별 타일지수*		
		T1=0.393	T2=0.710	T3=0.558
연령	집단간(T _B)	0.010	0.031	0.018
	집단내(T _W)	0.383	0.679	0.540
	T _B /T(%)	2.51	4.32	3.25
성	집단간(T _B)	0.076	0.179	0.066
	집단내(T _W)	0.317	0.531	0.492
	T _B /T(%)	19.41	25.21	11.79
교육수준	집단간(T _B)	0.068	0.121	0.042
	집단내(T _W)	0.325	0.589	0.516
	T _B /T(%)	17.30	17.03	7.44
혼인상태	집단간(T _B)	0.008	0.037	0.011
	집단내(T _W)	0.385	0.673	0.547
	T _B /T(%)	2.04	5.17	1.96
거주지	집단간(T _B)	0.001	0.001	0.001
	집단내(T _W)	0.392	0.709	0.057
	T _B /T(%)	0.25	0.14	0.10

주: * T1=총소득기준; T2=(총소득-사적이전소득); T3=(총소득-공적이전소득)

이번에는 타일지수로 측정된 총소득 불평등도를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분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타일지수 분해분석 방법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응답노인의 (만)연령, 성, 교육수준, 혼인상태, 그리고 거주지이다. 두 번째 열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정보는 타일지수로 측정된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해당 변수의 하위 집단 간 및 집단 내 불평등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 다시 언급할 세 가지 소득유형별(T1, T2, T3)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¹⁰⁾ 우선 T1으로 정의된 총소득 불평등(=0.393)을 해당 변수의 하위집단별로 나눈 결과를 살펴보면, T1 중 대부분은 각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하위집단 간 불평등보다는 하위집단 내 불평등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 변수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져, 이 변수들을 기준으로 측정한 하위집단 간 불평등의 경우 T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2.51%, 2.04%, 0.25% 등으로 아주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연령변수의 경우 64-69세, 70-74세, 75-59세, 80세 이상 등의 네 범주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들 하위 연령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2.51%로 나머지 97.49%의 경우 각 집단 내 존재하는 불평등의 합이며, 이는 적어도 소득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연령변수는 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T1을 성별, 교육수준별로 분해 분석한 결과의 경우 앞서 언급한 세 변수들보다는 많은 부분이 집단 간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각 19.41%, 17.30%), 여전히 80%이상의 불평등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노인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집단 간 불평등 보다는 집단 내 불평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어 제시되고 있는 〈표 6〉은 앞서 언급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집단 내 불평등 중 각 하위범주가 차지하는(혹은 기여하는) 불평등의 정도를 따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¹¹⁾

먼저 연령변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하위집단별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 역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소득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정도도 높으며, 교육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소득도 높은 반면 각 하위집단별로 측

10) 앞서 분석방법 절에서 정의한 것처럼 타일지수의 경우 집단 간 불평등과 집단 내 불평등을 합하면 항상 총소득 불평등과 일치하게 된다.

11) 각 변수의 집단 내 불평등(TW)은 하위 응답범주별 타일지수(Tj)에 각 응답범주가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Pj)을 곱해 합한 가중평균(weighted mean)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한 타일지수 역시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 평균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소득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불평등 정도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소득의 산술평균과 분산사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비례관계가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wang, 2013).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 하위집단별 타일지수*

변수명	응답범주	산술평균	하위집단 타일지수
연령(만 나이)	65-69세	79.44	0.430
	70-74세	66.41	0.383
	75-79세	60.66	0.365
	80세이상	53.15	0.333
성	여성	44.19	0.279
	남성	97.31	0.342
교육수준	무학/초등학교	51.48	0.295
	중/고등학교	89.38	0.332
	전문대학 이상	161.25	0.380
결혼상태	무배우	54.70	0.225
	유배우	72.25	0.463
거주지	읍면	63.12	0.338
	동	66.79	0.425

주: * 총소득(T1) 기준

마지막으로 〈표 5〉로 다시 돌아가 총소득 불평등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자. 앞서 제시한 지니계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종류의 소득 모두 전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두 소득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에는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가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0.162% vs. -0.021%). 이와 비슷한 개념의 효과를 타일지수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측정해보기 위해, ‘만약 사적이전소득(혹은 공적이전소득)이 없었다면 전체 불평등의 정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반사실적가정 상황을 설정한 뒤,

각 상황에 해당하는 불평등도를 측정된 결과를 <표 5>의 마지막 두 열에 표기하였다. 이 중 T2는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후 T1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평등도를 다시 측정해 본 경우이고, T3는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상황을 가정한 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사적이전소득이든 공적이전소득이든 각 소득이 총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에서의 전체불평등도는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사적이전소득이 부재할 경우 타일지수로 측정된 전체 불평등도는 0.393에서 0.710으로 크게 증가하고, 공적이전소득이 부재할 경우 역시 전체 불평등도는 0.558로 증가한다. 또한 앞서 지니계수 분해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전소득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불평등 증가가 공적이전소득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불평등 증가보다 커서, 오늘날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수준 및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상대적 역할 및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토론

인구고령화가 전 사회적인 인구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특히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노인빈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그리고 소득유형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노인들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동질성 및 이질성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 분해 분석과 타일지수 분해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드러난 오늘날 한국 노년층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니계수 분해 분석을 활용하여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소득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득원천별로 측정된 지니계수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불

평등도는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인층의 소득 및 불평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상당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소득원천은 전체 불평등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여 노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두 종류의 이전소득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타일지수 분해 분석을 통해 살펴 본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소득불평등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 소득불평등을 특정 사회인구학적 변수(예: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 등)의 하위 집단 간 불평등과 하위 집단 내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은 집단 간 불평등이 아니라 집단 내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 변수의 경우 집단 간 불평등은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이어서 적어도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동일집단 내 이질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성별, 교육수준별 격차는 노인층 소득불평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소득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강화 효과를 반사실적가정에 입각하여 추정해 본 결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가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이전소득 모두 전체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에 있어 사적이전소득의 완화효과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년기 소득 및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사적이전소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에 대한 부분이다. 흔히 한국사회의 경우 전체 예산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조세 및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러한 재분배적 요소들이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정지어 볼 때, 공적연금, 기타공적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국민기초보장생활급여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집단 총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령에 따른 불평등은 다른 어떤 원천의 불평등보다도 정부의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mpel, 1998). 노년에 이르기 전, 그리고 퇴직 이전에는 소득, 지위, 그리고 권력이 대부분 사적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에 좌우되나 퇴직 이후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임금보다는 공적, 사적 연금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노년기에 최고조로 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의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집단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그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집단과는 차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며, 그 분포의 불평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신광영(2009)이 지적하고 있는 오늘날 노년층의 노동현실, 즉 60세 이상의 경우 거의 80%가 경제영역에서의 외부자에 속하는 뼈피부르주아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노인들 간의 이질성 역시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은퇴연령이 넘어서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노인집단은 크게 여전히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집단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어 고소득 직종/직위에 머무르고 있는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정년연장 등에 의한 노령 노동인구증가는 노인집단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완화시킬 사회정책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에 의한 노년기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소득불평등에 있어 사적이전소득의 가능성이자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함께 노인 전체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불평등에의 완화효과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적이전소득은 시장상황에 따라 그리고 소득을 이전하는 주체의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정적인 노년기 소득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현 근로세대 내의 경제적인 불평등은 다음 세대의 불평등 및 사회이동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경우 현재 사적이전소득이 보여주고 있는 노년기 소득증대와 불평등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인회(2006) 역시 최근 노인빈곤 증대의 주요 원인을 자녀

세대로부터의 사적이전 감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년기 소득불평등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 역시 적지 않다. 우선 본 연구에서 밝혀진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양상에 대한 추이분석(trend study)이 필요하다. 시기에 따라 소득원천별,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소득유형별 불평등 수준 및 상대적 구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사회경제적 맥락과의 조응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평등의 분석단위를 달리하여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노인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경우와 부부 혹은 경제활동을 같이하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할 결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전자 및 후자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분석단위에 따른 노년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정도를 비교, 대조하는 연구 역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동 요소를 고려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예컨대,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노인빈곤의 증가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 역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바로 노년기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된다. 또한 최근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¹²⁾의 경우 일하는 동안 상당한 분담금을 내어 현재의 퇴직자들을 부양하는데 일조하고도, 전체인구의 구조적 변동에 의해 현재나 과거의 퇴직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노후를 민간 연금이나 저축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 민간연금은 공적연금보다 더 많이 과거의 시장소득에 연계되므로 노년의 불평등은 베이비 붐 세대에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외재적인 인구구조 변동의 결과라는 사실에서 볼 때, 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 역시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변동 속에서 조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년기 소득불평등, 나아가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논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인들을 특정 사회인구학적 집단(예: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으로 나

12) 방하남(2011)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본 세대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비율로는 14.6%를 차지하고 있다.”

늘 때에는 하위집단 간 차이보다 집단 내 차이가 더 두드러져, 이러한 경우 집단 내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동일한 노인집단을 다른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는(예: 성, 교육수준) 이들의 집단 내 이질성보다는 집단 간 이질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세대는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격한 경제발전, 그리고 인구학적 변동의 결과 개인 간 사회경제적 이질성이 증가하던 시대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을 시도하는 성급한 일반화는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적 범주 내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무시함으로써 과장된 사회적 결정론의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노년기 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 연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인집단의 복잡성 및 이질성에서 의미 있는 분석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미숙·원종욱·서문희·강병구·김교성·임유경. 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한준.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분해, 1998~2005.” 『한국사회학』 41(5): 35-63.
- 김정석.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9-77.
- _____. 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127-153.
- 김진욱·정의철. 2009.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편.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자료집』 pp403-418.
- 박경숙. 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 _____.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문화사.
- 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pp5-9.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335-352.

- 석상훈. 201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연금 이슈와 동향 분석』 2012-제2호, 국민연금연구원.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81: 35-60.
- _____.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여유진·김태완.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6(1): 95-134.
- 오미애. 2013.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25-35.
-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183-209.
- 이상봉. 2010. “부의 불평등 시각에서 바라본 연령 집단의 경제 불평등.” 『현상과인식』 201-219.
- _____. 2011. “경제 불평등 구조 분석: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25-57.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llison, Paul D. 1978. “Measures of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6): 865-880.
- Dannefer, Dale. 1987. “Aging as Intracohort Differentiation: Accentuation, the Matthew Effect, and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Forum* 2: 211-36.
- DiPrete, Thomas A., and Gregory M. Eirich. 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Elder, Glen, H., and Angela, M. O’Rand. 1995. “Adult Lives in a Changing Society.” pp.452-75 i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edited by Karen S. Cook, Gary Alan Fine, and James S. House.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Ferraro, Kenneth F., Tetyana Pylypiv Shippee, and Markus H. Schafer. 2009. “Cumulative Inequality Theory for Research on Aging and the Life Course.” pp.413-433 in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edited by Vern L. Bengtson, Merril Silverstein, Norella M. Putney, and Daphna Gans.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Firebaugh, Glenn D. 2003. *The New Geography of Global Income Inequality*.

-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lland, Paul W. 1986. "Statistics and Causal In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1: 945-70.
- Hwang, Sun-Jae. 2013. "Rising Earnings Inequality and the Role of Education Revisited."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40(1): 1-19.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and Jose Antonio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Lerman, Robert, I., and Shlomo Yitzhaki.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151-156.
- Merton, Robert K. 1968.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The Reward and Communication Systems of Science Are Considered." *Science* 159: 56-63.
- Morgan, Stephen L., and Christopher Winship. 2007.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Principle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1. *OECD Regions at a Glance*. OECD Publishing.
- O'Rand, Angela, M.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 30-38.
- Pampel, Fred C. 1998. *Aging, Social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Pine Forge.
- Phelan, Jo C., Bruce G. Link, and Parisa Tehranifar. 2010.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Health Inequalitie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S): S28-S40.
- Shorrocks, Anthony,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3-212.
- Smeeding, Timothy M. 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sectional Comparis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 No. CRR WP 2001-11, Boston College.
- Smeeding, Timothy M. 2005.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Vulnera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vidence from the LIS dataset." Paper presented at the APEC Symposium: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under Rapid Socioeconomic Change, Seoul, Korea.
- Stark, Oded, J., Edward Taylor, and Shlomo Yitzhaki. 1986. "Remittances and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6: 722-740.

Theil, Henri, 1967.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Chicago, IL: Rand McNally.

황선재는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및 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인구학, 그리고 통계적 방법론 등이다.

김정석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인구와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저출산, 국제결혼, 고령화 등이며 최근에는 노년사회학의 주요이슈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3. 4. 22 접수; 2013. 5. 9 심사(수정); 2013. 5. 21 게재확정]

Old-Age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Sun-Jae Hwang
Yonsei University
Cheong-Seok Kim
Dongguk University

Old-age income inequality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of rapidly aging Korean society, and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given its ripple effects to other socioeconomic arenas and a continually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study measures the overall level of income inequality among Korean elders aged 65 or above and decomposes the total income inequality into income sources (e.g. labor incomes, asset incomes, and transfer incomes etc.) and by primary demographic variables (e.g. age, sex, and education etc), using 2011 National Survey on the Living Status of the Korean Elderly. In addition, in order to explore the impact of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s on inequality alleviation/intensification, which are the two primary sources of old-age income, its magnitudes are estimated based on the counterfactual framework.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and Theil Index decomposition, the two widely used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methods, have been utilized as an analytic strateg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Korean elders' income is comprised of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s, and they both have significant inequality-alleviating effects compared with other income sources. Second, when the total income inequality is decomposed into between-group inequality and within-group inequality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st of th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lies in within-groups. Lastly, although both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s have significant inequality-alleviating effects, the impact of the private transfer income is found to be larger than the other from the counterfactual perspective. In the conclusion and discussion section, the socio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long with additional research to be conducted in order to hav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ld-age income inequality.

Key words: old-age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heil Index decomposition, population aging